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 뜨겁고 예민한 검찰 개혁에 대하여

한 때, 우리 사회에서는 합부로 이야기 하면 안 되는 3대 금기어(禁忌語)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지역 이야기이다.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좋지 않게 말하면 바로 흥분하고 싸우기 쉽다. 심지어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모르는 사람이 말을 엿듣고 흥분해서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와 말다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정치인과 정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연(連)인원 수천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국민이 많이 깨어나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 문제로 말 조심해야 할 영역이다.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조금이나마 비난하면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 자존심이나 신앙 가치를 언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정통 종교에서 이단(異端)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사이비(似而非) 종교도 신자 수가 많아지면 이단 딱지를 때는 사례도 많다. 정통 종교이더라도 눈이 먼 맹(盲)신도, 미친 광(狂)신도가 되

어서 상식과 이성을 잃어버리는 불행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된다. 종교는 고단한 이 세상에서 험난한 풍파(風波)를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화, 배려와 구원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다.

지역 문제도 지금은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경상도다, 전라도라고 하면서 말이 많고 우도 있고,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와 말다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정치인과 정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연(連)인원 수천만 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국민이 많이 깨어나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만 생각해도 불합리한 흑독한 지역 차별을 수십 년 견디고 해쳐 온 전라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호남이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과 소외로 낙후되고 기피하는 지역이 되어버린 현실에 결코 부정하거나 눈감고 모른 척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지역 차별과 소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은 중단없이 치열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뜨거운 정치사회적인 이슈인 검찰 개혁에 관하여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후일을 위하여 나의 소견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일반적인 세상사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도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자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 문제는 진영(陣營)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감한 문제이다.

진영(陣營) 논리는 자기 편은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잘못이고 나쁘다는 식의 대결 논리이다.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생사를 걸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진영 논리는 건전한 대결 정도를 넘어서 상식과 양심, 이성과 정의감을 마비시키고 사이버 종교의 광신도처럼 될 수도 있다. 진영 논리에 교묘한 정치적인 선동 선전과 대규모 군중 심리까지 더해지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갈 데 까지 가야 끝날 수 있는 위험

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체 검찰 개혁을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독립이다. 죽어 있는 권력에만 칼을 대는 가혹한 권력의 시녀(侍女)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격려해 놓고 정작 조국 전 장관 등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검찰을 적폐로 몰고 비난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본래의 검찰 개혁이 아니다. 그럴듯한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다.

검찰 개혁의 둘째 핵심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합리적인 권한 조정 문제이다. 수사 권한을 빼앗아서 검찰 무력화와 공수처의 독립·통제가 문제이다. 둘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수사 중인 검찰 인사 단행과 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현재의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가 중단 또는 유아무야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국민들은 조국 사태로 상처 받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다. 검찰 개혁으로 진영 논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社 說

### 스쿨존 강화함이 마땅하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된 질서의식이 요구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는 616곳, 전남에는 1030곳의 스쿨존(초등·특수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이 있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7년 36건(사망 1명·부상 38명), 2018년 28건(부상 52명), 2019년 38건(사망 1명·부상 48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7년 19건(부상 19명), 2018년 17건(부상 21명), 2019년 19건(부상 20명)으로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민식이법'의 큰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정·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한다.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지속

40km에서 30km로 강화하되,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보다 더 낮춰 20km로 제한한다.

모든 스쿨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대) 뿐이다. 광주·전남 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도 각각 8%(51대), 3%(35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전국 학교 6083곳 중 1834곳에 통학로 보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법 개정과 정부의 안전 대책은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시민들이 스쿨존에서 고도의 주의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급제동, 급출발, 주·정차 금지도 사망자 수 제로화를 위한 방법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자주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범죄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겨울철 주택화재, 기초소방시설로 대비를...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2~2018년) 총 30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주택화재는 총 5만 5091건으로 연평균 18.3%(7870건)이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연평균 47.8%(148명)로 가장 높았다.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심야 시간인 0~6시에 8652건(15.7%)으로 낮 시간인 12~18시

에 1만 8488건(20.7%)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발생률은 낮 시간인 215명(20.7%)인 것에 비해 심야시간은 339명(32.7%)으로 약 50%정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는 1.5배에서 높게는 20배가량 사망률이 높아 노인층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필요한 기초소방시설이란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 이상 감소하였고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

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 시도의 입상클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